2020 정책이슈리포트

Policy
iSSUE
REPORT

인천광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공기관 이전·설립정책 방향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공기관 이전·설립정책 방향 연구

연구진

박승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 구 원

Contents

I 인천광역시 현황 분석

1. 기초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 01
2. 부문별 현황 ····· 05
3.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 상대 비교 ····· 11

II 인천광역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방향 설정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 경과 ····· 19
2. 2차 혁신도시 사업을 통한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인천 소재 공공기관 ····· 21
3. 인천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신규 공공기관 설립(유치) 방향 ····· 26

III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존치 및 유치방안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설립(유치) 방안 ····· 30
2. 인천광역시 지역환경을 고려한 공공기관 존치 및 유치 방안 ····· 37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53

참고문헌 ····· 63

I

인천광역시 현황 분석

1. 기초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인천광역시 입지 부문 특성

- 동북아 국제도시
  - 인천광역시는 서울과 28㎞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황해에 접하고 한강의 하류에 위치함

    * 면적은 1,063.26㎢, 행정구역으로는 8구, 2군, 154읍면동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2018) •

구분	면적(㎢)	구성비(%)	읍면동	통리	반
인천광역시	1,063.09	100.0%	152	4655	23,037
중구	140.28	13.2%	12	280	1,197
동구	7.19	0.7%	11	205	981
미추홀구	24.83	2.3%	21	645	3,151
연수구	54.95	5.2%	13	508	2,657
남동구	57.05	5.4%	20	865	3,756
부평구	32.01	3.0%	22	654	4,223
계양구	45.57	4.3%	12	535	2,603
서구	117.08	11.0%	21	697	2,941
강화군	411.43	38.7%	13	188	1,256
옹진군	172.88	16.3%	7	78	272

자료 : 인천광역시(2020). 인천통계연보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



인구·사회 부문 특성

- 지속적인 인구증가
  - 2019년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957,026명으로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에서 5.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대비 2019년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9.1%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인구가 4.2%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인천광역시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서 2019년 5.7%로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인구 •

단위 : 명

행정구역	전국	인천광역시
2009	49,773,145	2,710,579(5.4%)
2019	51,849,861	2,957,026(5.7%)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 서구 중심 공간구조 형성

- 2019년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 544,566명(18.4%)이며, 다음으로 남동구 532,704명(18.0%), 부평구 511,577명(17.3%)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옹진군은 20,566명(0.7%)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동구 64,427명(2.2%), 강화군 69,178명(2.3%) 등 지역이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2009년 대비 2019년 중구는 89,688명에서 135,135명으로 50.7%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구 37.7%, 연수구 35.0%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동구는 77,308명에서 64,427명으로 -16.7% 인구가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계양구 -11.8%, 부평구 -9.3% 등 순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인구 •

단위 : 명

행정구역	2009년		2019년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중구	89,688	3.3%	135,135	4.6%
동구	77,308	2.9%	64,427	2.2%
미추홀구	419,935	15.5%	408,862	13.8%
연수구	271,497	10.0%	366,550	12.4%
남동구	463,414	17.1%	532,704	18.0%
부평구	563,920	20.8%	511,577	17.3%
계양구	344,039	12.7%	303,471	10.3%
서구	395,508	14.6%	544,556	18.4%
강화군	67,049	2.5%	69,178	2.3%
옹진군	18,221	0.7%	20,566	0.7%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의 도시

- 2019년 인천광역시의 연령별 인구는 15세 미만 375,242명(12.7%), 15-64세 2,197,236명(74.3%), 65세 이상 384,548명(13.0%)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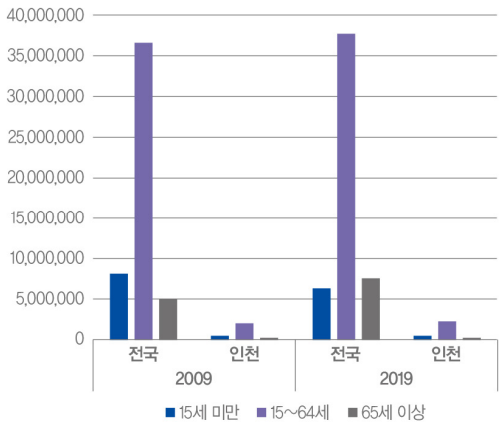
  * 2019년 전국의 연령별 인구는 15세 미만 12.5%, 15-64세 72.0%, 65세 이상 15.5%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는 전국에 비해 15세 미만 인구와 15-64세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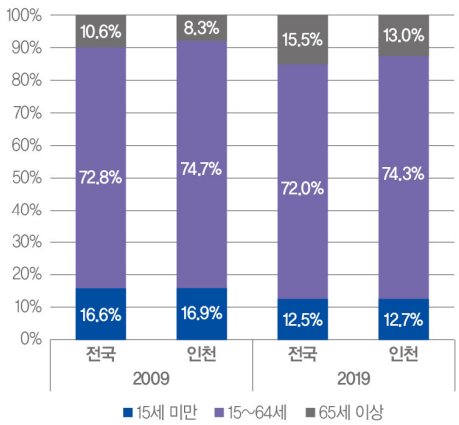
- 2009년 대비 2019년 인천광역시의 연령별 인구는 15세 미만 -18.3% 감소를 보였으며, 15-64세 8.5%, 65세 이상 인구는 7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대비 2019년 인천광역시의 인구비중 변화는 15세 미만 -4.3%p, 15-64세 -0.4%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인구 •

구분	2009		2019	
	전국	인천	전국	인천
15세 미만	8,248,987	459,398	6,466,872	375,242
15~64세	36,256,450	2,025,498	37,356,074	2,197,236
65세 이상	5,267,708	225,683	8,026,915	384,548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 인구유입에서 인구유출로 인구이동 변화

  - 2019년 인천광역시의 총전입인구는 420,169명, 총전출인구는 422,351명, 순이동인구 -2,337명으로 나타남

    * 시도 간 전입인구 143,933명, 전출인구 146,270명으로 전출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대비 2019년 인천광역시의 총전입인구는 -12.2%, 총전출인구 -11.3%, 순이동인구 -211.4%, 시도 내 이동인구 -9.1%, 시도 간 전입인구 -9.6%, 시도 간 전출인구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이동 •

구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 내 이동	시도 간	
					전입	전출
2009	478,169	476,071	2,098	165,110	159,271	157,173
2019	420,014	422,351	-2,337	150,091	143,933	146,270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2. 부문별 현황

산업·경제 부문 특성

- 3차산업의 증대 및 2차산업의 쇠퇴
  - 2016년 인천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은 68,261,406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분야별로는 「제조업」이 16,158,897백만 원(26.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업」 14.0%, 「도매 및 서비스업」 8.5% 등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2016년 인천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은 13.6% 증가하였으며, 산업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51.9%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3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7.9% 등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2016년 인천광역시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비중 변화는 「도매 및 소매업」이 1.5%p 증가하여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4%p, 「운수업」이 0.75%p 증가함
    * 반면, 동 기간 「제조업」은 -2.99%p 감소하여 지역내총생산의 산업 비중이 가장 크게 낮아졌으며, 「건설업」 -1.59%p, 「부동산 및 임대업」 -0.42%p 낮아진 산업으로 나타남

• 지역내총생산(GRDP)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		2016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60,708,051		68,261,406	
총부가가치(기초가격)	54,531,517	100.0%	61,920,887	100.0%
농림어업	245,898	0.5%	221,184	0.4%
광업	114,148	0.2%	88,061	0.1%
제조업	15,862,732	29.1%	16,158,897	26.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31,355	3.9%	2,784,404	4.5%
건설업	3,981,888	7.3%	3,537,958	5.7%
도매 및 소매업	3,824,012	7.0%	5,272,214	8.5%
운수업	7,222,292	13.2%	8,664,331	14.0%
숙박 및 음식점업	1,349,469	2.5%	1,484,079	2.4%
정보 및 통신업	1,069,049	2.0%	1,474,233	2.4%
금융 및 보험업	2,533,565	4.6%	3,086,006	5.0%
부동산 및 임대업	4,282,103	7.9%	4,601,995	7.4%
사업서비스업	2,020,818	3.7%	2,744,169	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63,192	5.8%	3,852,100	6.2%
교육서비스업	2,859,388	5.2%	3,006,072	4.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11,227	3.7%	3,054,551	4.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860,381	3.4%	1,890,633	3.1%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강세의 산업구조
  - 2018년 인천광역시의 사업체수는 2,035백 개로 나타났으며,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가 470백 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360백 개, 「운수 및 창고업」 261백 개 등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전국 내 인천광역시의 사업체수 비중은 전산업 4.9%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6.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5.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사업체수는 0.8%로 가장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광업」 1.7%, 「정보통신업」 2.3% 등 사업체가 적은 산업으로 나타남

- 2018년 인천광역시의 종사자수는 1,070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종사자수가 247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147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111천 명 등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전국 내 인천광역시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산업 4.8%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7.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0%, 「제조업」 6.0%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수는 0.5%로 가장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 등 종사자수가 적은 산업으로 나타남

- 2018년 인천광역시의 매출액은 27,474백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매출액이 8,840백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7,309백억 원, 「운수 및 창고업」 1,954백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전국 내 인천광역시의 매출액 비중은 전산업 4.6%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9.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3%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 매출액은 0.3%로 가장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업」 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 등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 및 종사자수(2018) •

단위 : 백 개, 천 명, 백억 원

구분	전국			인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전체산업	41,032	22,235	603,307	2,025	1,070	27,47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43	42	1,233	0.4	0.2	3.9
광업(05~08)	19	15	441	0.3	0.5	23
제조업(10~34)	4,370	4,106	191,961	252	247	8,84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23	65	15,556	0.7	3.7	1,1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90	109	2,600	5.0	6.5	203
건설업(41~42)	1,428	1,482	39,813	63	56	1,585
도매 및 소매업(45~47)	10,271	3,251	128,192	470	147	7,309
운수 및 창고업(49~52)	4,003	1,146	20,882	261	85	1,954
숙박 및 음식점업(55~56)	7,663	2,327	15,164	360	111	772

구분	전국			인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정보통신업(58~63)	439	599	16,288	10	10	204
금융 및 보험업(64~66)	436	711	76,972	18	26	1,683
부동산업(68)	1,602	521	12,957	82	23	6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123	1,074	21,925	38	31	47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05	1,188	8,782	30	47	3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25	735	13,600	4.9	37	651
교육 서비스업(85)	1,898	1,630	12,479	83	74	5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475	1,902	14,029	74	102	6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216	442	5,097	69	22	19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4,102	890	5,337	202	43	243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확대
  - 2008년 대비 2018년 인천광역시의 사업체수는 총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이 107.1% 증가하여 사업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9.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7.8%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부동산업」은 14.4% 증가하여 가장 적게 증가한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9%, 「광업」 18.5% 등 순으로 나타남
  - 2008년 대비 2018년 인천광역시의 종사자수는 총 3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69.9% 증가하여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8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종사자수는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 -4.9% 감소했으며, 「금융 및 보험업」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사업체 및 종사자수 •

단위 : 백 개, 천 명

구분	2008		2018		2008-2018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산업	1,580	765	2,025	1,070	28.2%	39.9%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2	0.2	0.4	0.2	50.0%	-14.5%
광업(05~08)	0.3	0.6	0.3	0.5	18.5%	-4.9%
제조업(10~34)	201	209	252	247	25.4%	18.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0.5	2.9	0.7	3.7	48.9%	27.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3.1	5.4	5.0	6.5	58.1%	19.7%
건설업(41~42)	44	31	63	56	43.9%	81.8%
도매 및 소매업(45~47)	379	109	470	147	24.1%	34.6%
운수 및 창고업(49~52)	201	57	261	85	30.1%	48.1%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88	77	360	111	25.3%	43.8%
정보통신업(58~63)	4.9	6.6	10.2	9.9	107.1%	49.0%
금융 및 보험업(64~66)	15	24	18	26	21.5%	8.4%
부동산업(68)	71	20	82	23	14.4%	1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23	18	38	31	67.8%	73.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9	29	30	47	56.4%	62.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4	29	5	37	16.9%	28.2%
교육 서비스업(85)	65	60	83	74	28.4%	2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41	38	74	102	79.0%	16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54	14	69	22	28.3%	6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66	36	202	43	21.7%	19.5%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문화·관광 부문 특성

- 감소하고 있는 관광객
  - 2018년 인천광역시의 총관광객수는 7,608천 명으로 유료관광지 방문객 3,791천 명, 무료관광지 방문객 3,817천 명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8년 집계관광객수는 -31.5% 감소하였으며, 유료관광지 방문객은 4.4% 증가하였으나 무료관광지 방문객은 -4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관광객수 추이 •

단위 : 천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집계관광지수	20	20	21	21	48	53
유료관광지 방문객	3,631	7,591	8,319	8,189	11,282	3,791
내국인	3,556	7,536	8,246	8,020	11,088	3,667
외국인	75	55	72	169	195	124
무료관광지	7,469	7,983	13,815	15,562	15,681	3,817

자료 : 인천광역시(2020). 인천통계연보

- 인천광역시의 문화재는 총 265개로 국가지정문화재 69개, 지방지정문화재 163개, 등록문화재 8개로 나타남

• 문화재수 추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247	252	264	263	264	265
국가지정문화재	68	68	68	68	68	69
지방지정문화재	150	152	164	163	163	163
등록문화재	7	7	7	7	8	8

자료 : 인천광역시(2020). 인천통계연보

- 증대된 문화 인프라
  - 2018년 인천광역시의 문화공간은 총 94개로 공공공연장 31개, 민간공연장 13개, 영화관 28개, 미술관 6개, 지역문화복지시설 4개, 기타 12개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8년 인천광역시의 문화공간은 총 8개가 증가했으며, 그 중 민간공연장, 영화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공간 추이 •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 복지시설	기타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2013	86	29	8	20	4	3	11	11
2018	94	31	13	28	6	-	4	12
중구	14	5	4	3	1	-	-	1
동구	8	1	-	1	1	-	4	1
미추홀구	14	5	1	4	1	-	-	3
연수구	10	3	2	4	-	-	-	1
남동구	12	6	2	3	-	-	-	1
부평구	10	2	2	5	-	-	-	1
계양구	5	3	-	1	-	-	-	1
서구	15	6	2	6	-	-	-	1
강화군	5	-	-	1	3	-	-	1
옹진군	1	-	-	-	-	-	-	1

자료 : 인천광역시(2020). 인천통계연보

3.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 상대 비교

부문별 상대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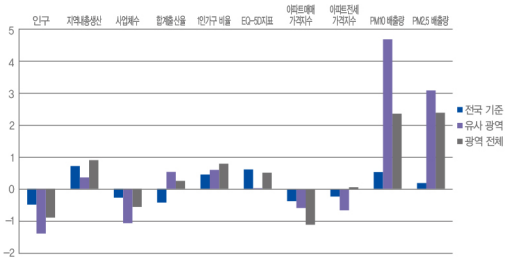
- 일반, 발전부문으로 구분하여 인천시 지자체의 발전정도 파악
  - 전국(시군구), 유사(전국 구 또는 군), 광역(인천시 전체) 대비 Z-score 활용한 상대적 위치로 Z-score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도를 제시

중구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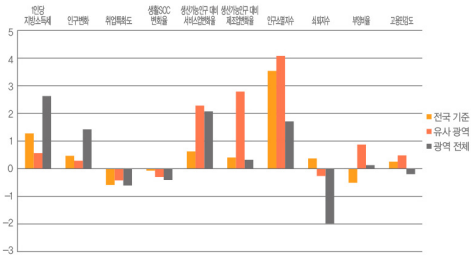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중구는 기초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지역내총생산이 창출되지만 사업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
  - 지역 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지방보조금비율 및 일자리사업 지출비율은 낮아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 필요

- 생산가능인구 대비 서비스업 변화가 전국 유사 구대비 양호하나 취업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미약

• 일반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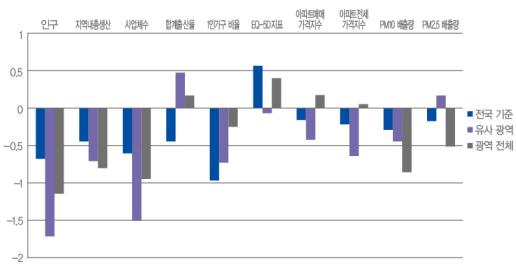
• 발전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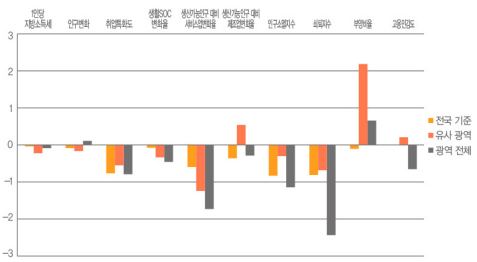
동구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 인천광역시 동구는 기초지자체 중 낮은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특성을 나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이 필요
  - 특히,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필요
  - 지역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자주도 대비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지방보조금 비율 역시 낮아 지역 보조를 통한 개발 방식 적용이 필요
  -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쇠퇴 성향으로 인해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높은 부양비율로 인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정책이 필요

• 일반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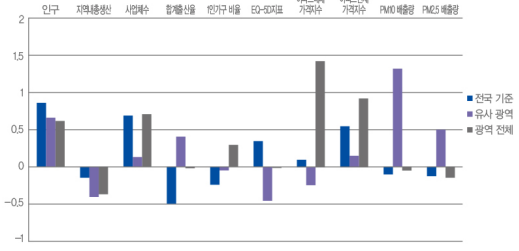
• 발전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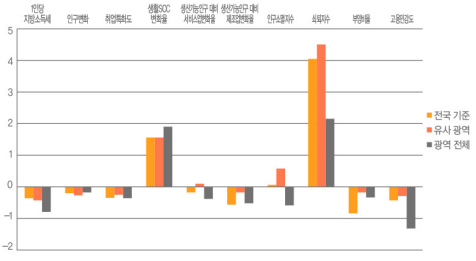
남구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 인천광역시 남구는 인구에 비해 지역내총생산과 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
  - 특히,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지역 유지를 위해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 필요
  - 지역 내 높은 부채비율 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지역 소득 창출을 통한 수입원 개발이 필요
  - 상대적으로 양호한 쇠퇴지수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가 정체되어 있으며 취업특화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SOC에 반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인구유입을 위한 기관 유치가 필요

• 일반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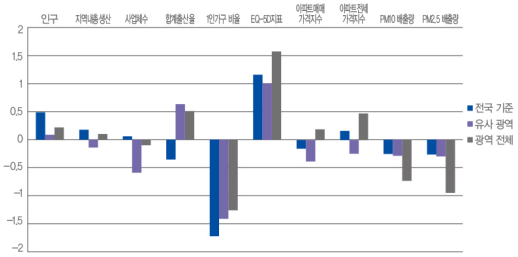
• 발전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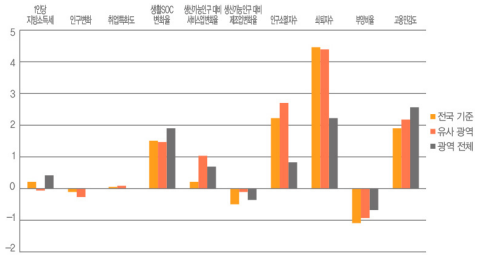
연수구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체수에 비해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 및 양호한 부채비율에 비해 일자리사업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
  -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SOC에 반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인구유입을 위한 기관 유치가 필요
  - 반면, 지역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일반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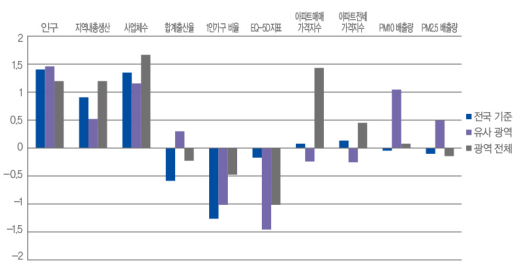
• 발전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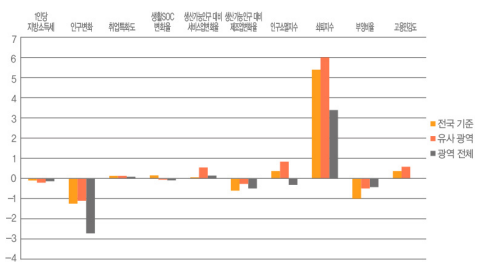
남동구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지역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해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필요
  - 반면, 지역쇠퇴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안전도(EQ-5D)로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투입 필요
  - 높은 지역내총생산에 비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이 낮음
  - 더불어,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출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필요
  - 지역 내 대비 낮은 인구변화와 지역쇠퇴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재생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유치 필요

• 일반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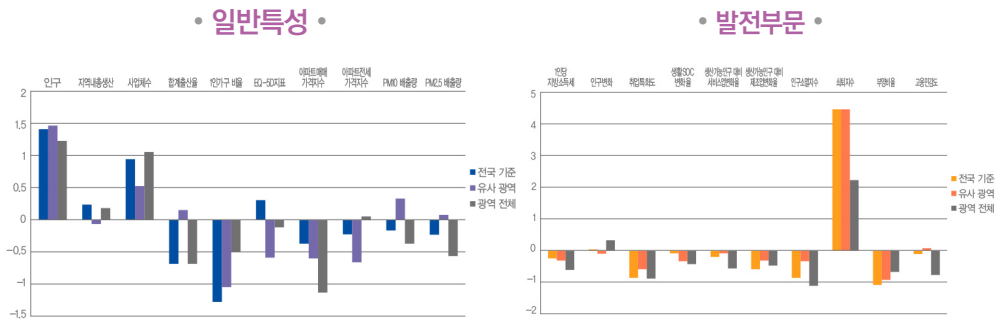


• 발전부문 •



부평구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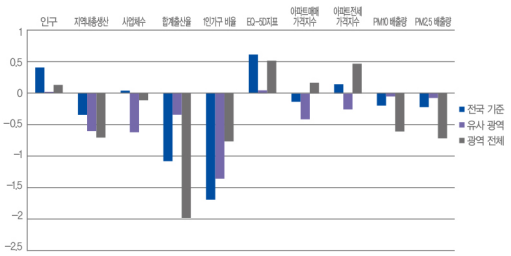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지역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해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필요
  -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내총생산으로 인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이 낮으며 부채 비율이 높음
  - 1인당 지방소득세가 낮아 높은 사업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의 원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취업특화도 역시 낮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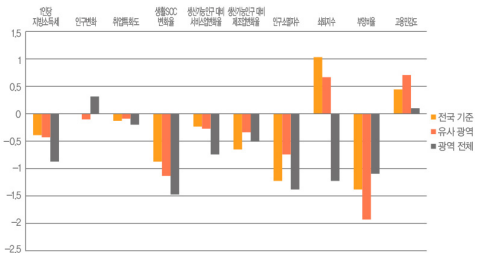
계양구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
  -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내총생산으로 인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이 낮으나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
  - 1인당 지방소득세가 낮아 높은 사업체수 확보를 통해 소득의 원천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취업특화도 역시 낮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

• 일반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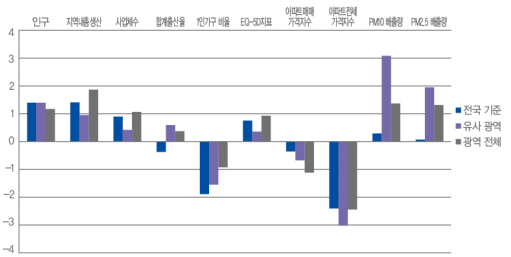
• 발전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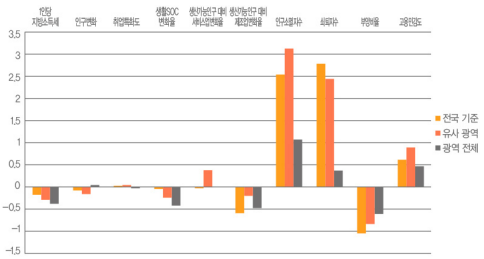
서구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역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에 비해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해 인구 유입을 위한 기관 유치가 필요
  - 지역 내 기초지자체 중 양호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서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 개발 방식 적용이 필요
  -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내총생산으로 재정자립도은 양호하나 재정자주도은 낮고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전 원천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 강화 필요

• 일반특성 •



• 발전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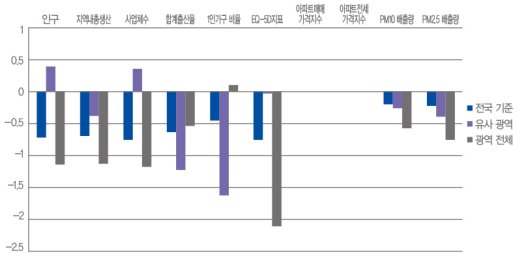


강화군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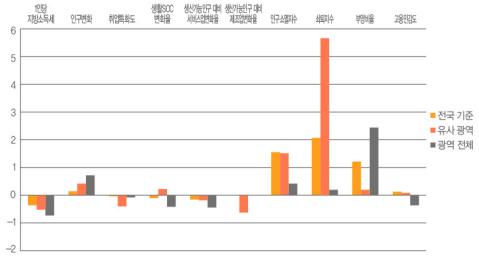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

-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내총생산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
- 반면, 지역 내 기초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지방소득세로 사업체수 확보를 통해 소득의 원천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취업특화도 역시 낮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

• 일반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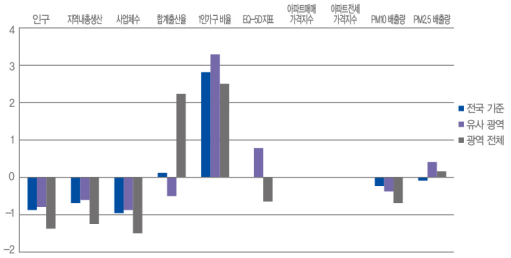
• 발전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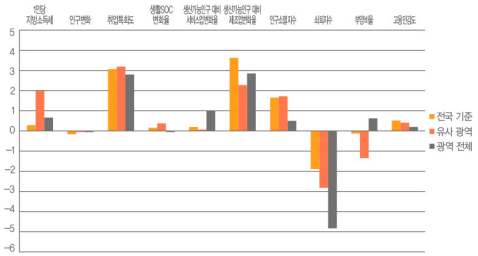
옹진군의 부문별 상대적 여건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지역 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로 인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
  - 옹진군의 적극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의 유치가 필요
  -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내총생산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
  - 1인당 지방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인구변화가 매우 낮아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필요
  - 특히, 취업특화도가 지역 내 기초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의 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

• 일반특성 •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함계출산율
인가구 비율
EDI-SDI지표
아파트매매 가격지수
아파트전세 가격지수
PM10 배출량
PM2.5 배출량
4
3
2
1
0
−1
−2
전국 기준
유사 광역
광역 전체

• 발전부문 •


인천 지방소득세
인구변화
취업률지도
생활SOC 변화율
원거성은구 예비 서비스업변화율
원거성은구 예비 제조업변화율
인구셀제수
쇠퇴지수
부양비율
고용인접도
5
4
3
2
1
0
−1
−2
−3
−4
−5
−6
전국 기준
유사 광역
광역 전체

II

인천광역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방향 설정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 경과

-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2003.6.12)'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의지 공식 천명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245개 정부 소속·출연기관 지방이전 제시
  -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과 병행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조직을 신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위원회'(2004.5),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2004.4)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에 앞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중앙-지방 간 기본협약' 체결(2005.5.27)
  - 한국노총(2005.6.21), 민주노총(2005.6.23)과 '노·정 간 기본협약' 체결
- 혁신도시 건설정책 추진(2005~2019)
  - 혁신도시별 부지조성 공사 착공(2007.9)
  - 2012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지방이전 개시, 2019년 12월 말 이전 완료(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2개)

•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추진경과 •

연도	주요내용
2003. 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대구선언)
2004.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 마련
2005. 상반기	국회보고, 노조대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2005. 5~6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기본협약' 체결, '노정 기본협약' 체결
2005. 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발표
2005. 12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2006. 4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방향 마련
2007. 1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 4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2007. 12~2014. 12	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및 변경 승인
2009. 6	혁신도시 발전방안 수립
2017.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개정(2018. 3. 27 시행)
2018. 3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기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2019. 12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 이전 완료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며, 지방은 인재가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곳으로 전환

-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걸림돌
  - 이전기관 종사자와 관련된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어,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기대
  -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 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은 약 85%에서 3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1)]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 체계구축

1) 출처 : https://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10&stype=1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증가 및 이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

-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이전기관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17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2002~2004년간 지방세 납부액: 2,268억 원(연평균 756억 원)[2)]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전망
  -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2000년 국토연구원) :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49.35%, 각종정보의 수도권 집중 28.8%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국토부)
  - 약 180개 기관의 약 3만 2천 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약 13만 3천 개의 일자리(연관산업 일자리 포함) 증대 예상
  -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 원 추산[3)]

2. 2차 혁신도시 사업을 통한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인천 소재 공공기관

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추가 이전 분위기 조성

-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이전제외 대상을 규정

2) 출처 : https://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10&stype=1
3) 출처 : https://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10&stype=1

-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154개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배치계획이 계획됨

4) 출처 : https://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4&stype=1

•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 •

시도	기능군	이전기관
부산(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대구(11)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한국가스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광주전남 (16)	전력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울산(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강원(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충북(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북(12)	국토개발관리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경북(12)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경남(11)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9)	국제교류, 교육연수 등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등
세종(19)	국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개별이전 (21)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해양경찰학교(여수),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서부발전(태안), 경찰대학(아산), 국방대학교(논산) 등	

자료 : 이해찬 의원실 보도자료(2017. 10. 10)

-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인원 약 58천 명)
  - 2016년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이전율 92.8%),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기설정[5)]

    * 2005년 6월 최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8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서울시 117개, 인천시 7개, 경기도 28개)

5) 이해찬 의원실 보도자료(2017. 10. 10)

- 시행령 제16조 7호에 따라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따라 이전제외기관이 늘어날 수 있음

•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 •

소재지	기관수	이전대상	근무인원	주요기관
서울특별시	117개	99개	48,066명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인천광역시	7개	3개	4,246명	한국환경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경기도	28개	20개	5,896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합계	152개	122개	58,208명	

• 인천광역시 지방이전 대상 기관 •

대상	주무부처	기관유형	대상인원	주요업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기타 공공기관	1,830	•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기간산업과 신성장 산업분야의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핵심기술 인력 양성 • 취업을 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양성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중소기업 기술지도, 창업 보육센터 운영 등 향상훈련과 산학협력사업 교육 • 일학습병행제 및 NCS 확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교육훈련기관 혁신 지원
항공안전 기술원	국토교통부	기타 공공기관	56	• 「항공안전법」 제23조 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 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 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2,360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원 순환을 말함)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의 점검, 진단, 검사, 설치, 운영 및 기술지원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 토양, 지하수 환경의 조사, 평가, 검증, 인증, 정화 사업 및 관리 •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 포함)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 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운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 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단,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 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위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 감독, 감리 •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위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저자 작성

3. 인천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신규 공공기관 설립(유치) 방향

- 인천이 글로벌 음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악페스티벌 등 음악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음악활동을 활성화할 수 공공기관 설립
  - 인천의 음악자원을 토대로 한 음악도시 방향 설정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향후 음악 관련 창작활동 및 음악축제 지원 사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음악교육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이 추진 가능
  - 음악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음악도시 조성
  - 대표 음악축제로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와 INK 콘서트, 월드클럽돔 코리아 등이 있으며 군·구 음악축제로는 부평구의 부평풍물대축제와 서구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이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인천광역시는 생활문화센터 8개소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 생활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을 시행
  - 반면, 인천광역시 음악자원을 관리 및 대내외로 확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부재

• 인천 음악도시 조성을 통한 문화산업활성화 SWOT 분석 및 전략방향

• 인천광역시 문화산업 활성화 전략방향 •

내부역량 \ 외부환경	기회(O)	위협(T)
	• 중앙정부 문화도시 사업 연계 •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조성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 부평음악도시 후속사업 준비	•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추진 • 대중음악 활동기회 서울 집중 • 대구, 통영 선제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 연계 계획 부재
강점 (S) • 음악도시 추진 법적 기반 • 역사성 및 음악자원 보유 • 다양한 음악축제 개최 • 부평음악융합도시 추진 경험	SO전략	ST전략
	• 음악문화도시 지정 신청 • 음악자원 발굴·가치 확산 • 음악축제 지향점 재정립 • 인천-부평 음악도시 연계 추진	• 음악도시 인천 추진계획 수립 • 지역음악인 활동 지원 •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 국내외 음악도시 네트워킹
약점 (W) • 음악기반시설 부족 • 전문인력양성 미흡 • 음악산업생태계 미흡 • 음악동호회 양질 다양성 미흡	WO전략	WT전략
	• 공연장 등 음악기반시설 확충 • 시민 음악교육 사업 추진 • 음악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 음악동호회 발굴 및 지원	• 음악산업 진흥기반 조성 • 음악인 및 전문인력 양성 • 음악 관련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 2016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주민 수요가 높은 부분은 경제(1위), 산업(3위), 문화(4위)로 나타나 문화와 연계된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

- 특히,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은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 및 경제 부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의 존치 및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옹진군은 의료, 문화, 교육, 복지에 대한 수요가 타 기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설정을 통한 공공기관 존치 및 유치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

구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평균	순위
주택	5.83	5.54	6.44	7.46	6.68	6.33	7.00	6.25	7.33	6.36	6.52	9
안전	6.33	5.86	6.29	7.38	6.74	6.33	7.17	6.43	7.64	6.48	6.66	10
교통	6.41	6.97	7.05	7.12	6.92	7.50	7.51	6.64	6.44	5.88	6.85	11
산업	4.91	4.83	5.47	5.94	5.68	5.48	5.62	5.68	5.77	5.82	5.52	3
경제	5.33	4.51	5.43	5.73	5.47	5.28	5.23	5.54	4.94	5.72	5.32	1
교육	5.31	5.01	5.87	6.89	6.21	6.08	6.23	6.24	5.96	5.52	5.93	6
문화	5.40	5.27	5.35	6.50	5.88	5.49	5.66	5.44	5.44	4.92	5.54	4
환경	5.80	5.84	5.75	6.80	6.68	5.71	6.54	5.78	7.96	7.28	6.41	8
복지	5.70	5.61	5.33	6.34	5.96	5.68	5.89	5.88	6.40	5.52	5.83	5
의료	6.03	6.34	6.22	6.68	6.59	6.38	6.13	6.74	5.37	4.86	6.13	7
생활 인프라	6.66	7.06	7.76	7.83	7.47	7.18	7.47	7.82	6.23	5.52	7.10	12
주민 참여	5.61	5.37	5.01	5.76	5.45	5.40	5.44	5.44	5.97	5.64	5.51	2

- 인천광역시의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추진 정책이 필요
  - 지역산업 육성 :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 수요를 대응한 R&D, 공공기관 참여 창업인프라 개발
  - 지역인재 양성 : 산학연 연계 운영, 청년인턴십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 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 수요 반응형 학과 개설
  - 지역상생 확산 : 지역구매 등 상생모델 구축, 사회공헌기금 조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존치를 위한 특화사업 개발
  - 지역 내 공공기관 존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선순환으로 연계될 수 있는 메가 특화사업의 개발
  - 국내관광객 수요 증대를 통한 인천광역시 문화산업 활성화로 문화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지역문화경제활성화(안)

• 주요 혁신도시 메가 특화사업(예) •

혁신도시(주요 기관)	10대 협업과제	대표 프로젝트 사업
부산 (자산관리공사)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 부산형 상생혁신타워 • 부산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대구 (가스공사)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
울산 (석유공사)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조성	•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개발 • 산단 지붕태양광 설치
경북 김천 (도로공사)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 스마트 물류시설 구축 •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조성
경남 진주 (토지주택공사)	기업이전·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 스테이션 K 건립 • 지역 중소기업(협력사)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전북 전주·완주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 전북 금융타운 조성
광주·전남 나주 (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조성	• 유치기업 투자 촉진 위한 이자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 • 에너지밸리 특화인력 양성 및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원 원주 (건강보험공단)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 채용 전제 특화실습교육
충북 진천·음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 ICT 교육환경 구축 등 언택트 교육특화 • 5G+실감 교육콘텐츠 개발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스마트 MICE 활성화	• 제주권역 지역선도대학 육성 • 제주 EV랩 구축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2(2020)

III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존치 및 유치방안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설립(유치) 방안

서울, 경기대비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분야 상대적인 경쟁력 보유

- 인천광역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도시활성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 분석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
  - 더불어, 수도권 내 타 광역시도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하여 인천광역시의 관련 산업별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수도권 3개 특광역시도의 산업별 영향력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

-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 존치 및 유치를 위해서는 특화된 산업의 산출이 필요하며,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의 파악은 생산승수, 고용승수, 전방효과, 후방효과로 구분
  - 생산승수는 인천광역시 내 자원투입으로 산출되는 생산액의 증가를 의미
  - 고용승수는 인천광역시 내 자원투입으로 부가적으로 산출되는 고용창출을 의미
  - 전방효과는 인천광역시 내 산업 간 연계과정을 통해 타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산업의 발달을 유발하는 정도를 의미
  - 후방효과는 인천광역시 내 산업 간 연계과정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재 생산 타 산업의 발달을 유발하는 정도를 의미

- 생산승수 기준 인천광역시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산업 분야는 건설업, 제조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
  - 고용승수 기준 인천광역시의 경제적인 성과를 증대시키는 산업 분야는 음식점 및 숙박, 도소매, 사회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됨
  - 전·후방효과 기준 인천광역시의 경제적인 성과를 증대시키는 산업 분야는 제조업,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
  - 반면, 대다수 공공기관이 해당하는 공공행정 및 국방의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전·후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생산승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공공기관 존치 및 유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유지하며 타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산업으로는 생산 및 고용승수, 전·후방효과 기준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산업 간 영향력 분석 •

구분	생산승수	고용승수	전방효과	후방효과
농림수산품	1.831	0.072	0.703	1.027
광산품	1.778	0.010	0.569	0.997
제조업	2.084	0.012	3.250	1.169
전력, 가스 및 수도	1.274	0.002	0.861	0.715
건설	2.007	0.018	0.631	1.126
도소매	1.692	0.034	0.959	0.949
음식점 및 숙박	2.088	0.037	0.802	1.172
운수 및 보관	1.792	0.010	0.895	1.005
통신 및 방송	1.806	0.009	0.827	1.013
금융 및 보험	1.632	0.010	1.134	0.91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92	0.011	1.232	0.837
공공행정 및 국방	1.507	0.017	0.568	0.845
교육 및 보건	1.574	0.020	0.615	0.883
사회 및 기타서비스	2.396	0.028	0.955	1.344

자료 :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저자 직접 산출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존치 및 유치를 위해서 공공기관 산업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자원 관련 산업을 수도권 내 광역시도와 비교가 필요
  - 대다수 공공기관이 해당되는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서울 대비 생산, 고용, 전·후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기도 대비 인천광역시의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고용효과 측면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약 9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서울 및 경기 대비 인천광역시 공공행정 및 국방 상대적 경쟁력 •

구분	생산승수	고용승수	전방효과	후방효과
서울대비	1.012	1.065	1.003	1.023
경기대비	0.988	1.205	0.985	0.982

자료 :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저자 직접 산출

- 인천광역시 산업 구조 중 생산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설업 및 제조업 외에 가장 큰 생산효과를 파급하는 산업은 사회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되었으며, 문화예술 분야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분야에 포함됨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서울 및 경기도 대비 생산, 고용, 후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수도권 3개 광역시도 중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의 유치로 인한 해당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천광역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및 경기 대비 인천광역시 사회 및 기타서비스 상대적 경쟁력 •

구분	생산승수	고용승수	전방효과	후방효과
서울대비	1.059	1.264	0.871	1.069
경기대비	1.071	1.218	0.998	1.065

자료 :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저자 직접 산출

문화·예술·디자인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관문도시로서의 문화도시 구현

- 인천광역시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이미지가 곧 국가의 이미지로 정립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존치 및 유치하기 위해 노력 경주
  -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문화·예술·디자인이 경관과 환경에 반영된 도시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도시 차원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
  -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로서의 문화도시를 구현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기관 가운데 문화·예술·디자인과 관련한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을 포함한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안)

    * 문화·예술과 관련한 공공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이전한 광주·전남혁신도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이전한 강원혁신도시로 추가 이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접근

- (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
  -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
  - 1994년 설립된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설립된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설치된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에 출범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140명으로 집계

- (안)㈜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
  -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외득 증대,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투자, 관광객을 위한 야간관광상품제공 등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자 2005년에 설립
  - 영업장은 코엑스센터 컨벤션 별관의 서울강남점세븐럭, 밀레니엄 서울힐튼점, 세븐럭 부산롯데점 등이 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1,890명으로 집계
  - 비수도권 영업장은 부산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부산광역시에서 유치 노력의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이기도 해서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음

- (안)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문제의 관리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에 설립
  -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정선에 분소 있음), 대전, 대구, 경남, 광주, 부산 등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93명으로 집계

- (안)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
  - 전 국민이 일상적 삶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2006년에 설립
  - 설립 이후 10여 년 동안 주사무소만 4번을 옮겨 처음에는 경복궁에서 시작했고, 2008년 구로동(현 구로구민회관), 2013년에는 성산동(옛 마포구청)으로 이전하였다가 2016년에 현 위치인 상암동 YTN 건물에 입주

- 영문 명칭을 줄인 것은 케이시스(KACES)지만 대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인 아르떼(ArtE: Art & culture Education)라는 말로 많이 불리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139명으로 집계

• (안)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 보호, 전통문화행사 복원 등의 사업을 하는, 문화재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위하여 1980년에 설립
-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394명으로 집계

• (안)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화 관련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

-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를 촉진하고 창의적인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에 설립
-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60명으로 집계

• (안)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

- 예술기관 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제교류, 인력양성, 정보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설립
- 20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64명으로 집계

• (안)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실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

-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 전문번역가 양성, 한국문학 해외교류 사업 등을 통하여 한국문학 해외 선양에 기여하고, 문학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56명으로 집계

• (안)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

-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에 한국공예문화진흥원으로 설립
- 2010년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되어 201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65명으로 집계

• (안)세종학당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2012년에 출범
- 2013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97명으로 집계

• (안)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

- 1984년 문교부 산하의 국어연구소로 출발해 1990년 문화부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같은 해 직제가 개정되어 국립국어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정원도 35명으로 증가
- 2000년 현 위치인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4년 대통령령에 의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변경

• (안)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 각종학교로, 서울 성북구 및 서초구, 종로구에 분산 입지

- 1993년 국가정책 차원에서 예술 실기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치령을 제정해 4년제 국립 각종 학교로 개교했으며,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의 예술교육을 실시

-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의릉에 위치한 성북구 교사의 이전을 문화재청이 요청함에 따라 2022년까지 성북구 교사와 서초동 교사, 종로구 교사를 통합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
- 세 교사를 통합 이전한다면 낭비성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이전이 어려워지겠지만, 성북구 교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서초구 교사와 종로구 교사를 합쳐 이전할 가능성도 있음

2. 인천광역시 지역환경을 고려한 공공기관 존치 및 유치 방안

교통·물류산업 중심 도시

- 수도권 대상 한국은행의 중분류 산업 간 생산을 활용하여 교통 및 물류 산업 여건을 파악한 결과 인천의 수상운송서비스는 서울 및 경기 대비 각각 약 1.2배, 5.3배로 수도권 내 중심적인 수상운송서비스 담당
  - 항공운송서비스 역시 서울 대비 1.1배의 서비스를 담당하여 항공운송 중심도시 역할 수행

• 지역별 수상 및 항공 산업 비교 •

단위 : 백만 원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수상운송서비스	47,957	58,573	10,909
항공운송서비스	434,765	508,088	0

자료 : 한국은행 지역통계서비스

인천의 전략산업으로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의 존치 필요성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이전 대상 116개[6]의 공공기관 중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이 포함되어 인천광역시가 계획·추진하는 로봇랜드 사업에 어려움 발생

6)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0515267677946

-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2017년 10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청라국제도시로 이전

"국가 정책임을 공감하고 결정 권한 또한 없지만 (항공안전기술원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잦은 이전으로 직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 항공인력 대다수가 공항이 위치한 인천과 김포 등지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2017년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것도 이러한 이유와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라에 정착하는 것을 원한다." – 항공분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회의(2019.10.7)에서 항공안전기술원 직원의 발언(「더 청라」 2019년 10월 9일 기사에서 인용)

- 로봇랜드 입주 기업 대부분이 항공안전기술원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원의 이전은 이들 기업의 연쇄적인 동반 이전을 의미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하면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도 이전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 … 로봇타워에 입주한 다른 기업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거세다. … 특히 지방 이전 시 전문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다." – 항공분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회의(2019.10.7)에서 로봇랜드 입주 기업 관계자의 발언

• 인천광역시의 권역별 항공산업 육성계획 구상 •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한국경제신문 2018년 10월 23일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0234032h
(검색일 : 2020년 5월 22일)

-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하는 경우, 국비가 반영된 드론인증센터(로봇랜드 건립 예정)와 드론전용비행 시험장(인근 수도권매립지 건립 예정) 사업은 물론 인천·김포공항과 연계된 영종도 항공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단지 조성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로봇타워에 입주한 항공안전기술원과 유관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오랜 기간 진척되지 못한 로봇랜드 사업의 추진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는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기존의 내용 수정을 포함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에 있음

• 청라국제도시의 로봇랜드 사업부지에 들어선 로봇타워 전경 •



자료 : 경인일보 2019년 12월 20일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78020&memberNo=24167781&vType=VERTICAL(검색일 : 2020년 5월 22일)

- 정부가 혁신과제로 선정한 '인천 무인항공기(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2018.8.8)에서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드론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선정

    * 인천시는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드론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

- 드론산업과 관련한 기획,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생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2021년까지 국비 등 59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전용비행장 등을 갖춘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공역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의 유휴부지에 드론 운영센터와 정비고, 이·착륙장을 만들어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드론을 상용화하기 전에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 항공안전기술원의 로봇랜드 입지는 드론클러스터 사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인증센터 구축 사업의 위탁수행 기관으로,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기업이 입주해 있는 로봇랜드에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해 드론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음

•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은 인천시가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산업 도시임에도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핵심 항공 관련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의미

- 인천국제공항에는 120만㎡ 규모의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정부지원 항공정비(MRO)사업 대상지로 경남 사천을 선정

- 항공산업의 전략적 정책 추진을 위해 프랑스의 항공우주도시, 툴루즈의 환경을 벤치마킹

- 국가의 항공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국립우주연구소(CNES), 국립고등항공학교(ENSA), 국립민간항공학교(ENAC) 등이 1968년에 툴루즈로 이전(배준구, 2017: 191)

- 2005년에 조성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는 툴루즈가 속한 미디-피레네 레지옹(지역)과 보르도가 속한 아키텐(Aquitaine) 레지옹에 걸친 우주항공 분야의 세계적 규모의 광역클러스터이며, 7개 세계적 경쟁거점 가운데 하나에 해당

  *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에어버스(Airbus)·알카텔(Alcatel)·알스톰(Alstom) 등 대기업과 중소 부품회사를 합쳐 500여 개 기업에서 12만 명(연구인력 8,500명, 전체 R&D인력의 45% 차지)이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 영역은 국방항공분야가 70%, 우주 20%, IT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10%를 구성(배준구, 2017: 194)

  ** 클러스터 내에는 항공관련 3개 학교(Supaero·Ensica·Enac)와 기타 엔지니어링대학, 그리고 항공관련 선도 기업체의 1,000여 명의 연구자를 통해 유럽 최대의 항공우주 캠퍼스를 구축

- 실물 크기의 혜성 탐사선과 화성 탐사선이 전시되어 있고 달에서 걷는 기분을 체험할 수 있는 항공우주과학관은 툴루즈의 명소

• 프랑스 툴루즈의 항공우주과학관 내·외부 모습 •





자료 : Citi de L'espac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karipr/221004149895(검색일 : 2020년 5월 23일)

- 3개 대륙과 8개 국가를 거쳐 옛 비행노선을 따라 15,000㎞의 여행을 재현하도록 설계된 항공노선 공원이 조성

  * 툴루즈에서 지구 반대편 칠레의 발파라이소까지 이어지는 전설의 항로를 따라 스페인, 모로코, 모리타니, 세네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경유하며 각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종합환경연구단지의 확대·완성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의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방지, 자원순환,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 서울 소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2000년 조성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로 각각 이전해 왔다가 2010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 오늘날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어짐

    * 2000~2001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력개발원이 들어섰고, 2007년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직원들의 반발도 많았지만, 환경부 산하 기관이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생활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이동했다. … 지금은 기관 통합 이후 인천에 잘 정착을 했고, 환경부 내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경인일보」 2018년 9월 10일 기사에서 인용)

- 환경부는 1990년대 초반 환경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정보수집관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연구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선정
- 수도권매립지에 연구시설을 짓는 것은 미개발된 주변 여건이나 악취 등을 고려하면 좋지 않다는 부정 여론이 있었으나, 대덕연구단지와 시흥매립지 등 다른 후보지를 제치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

* 당시 환경부는 환경 관련 기관을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매립지에 한데 모아 21세기에 급증하는 환경 정책 대처 능력을 갖추겠다고 조성 이유를 밝혔지만, 실상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으로 연구시설을 매립지에 입지

• 수도권매립지 위치도 및 전경 •





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부자료. 경향신문

-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입주기관으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한 일에 해당
  -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은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관
  - 1992년 수도권매립지 첫 반입이 시작된 이후 환경관리공단은 인천 서구에 매립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 반입과 처리,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1992년 당시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 서구·김포시 일대에 설치

- 1994년 환경부가 수립한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인천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언급

* 쓰레기 매립장, 인천공항이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현상 연구, 현장자료 수집 및 실험이 용이하며, 수도권에 인접해 산학연 협조체제의 구축이 쉽고 기존 연구기관을 대상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서에 명시

• 인천 환경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주한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 예보, 대기 측정망 운영, 공장 굴뚝 오염도 측정 등 인천시 환경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

-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 최전선에서 감내하고, 공장과 발전소, 항만시설에서의 매연, 수도권매립지가 입지한 인천에 한국환경공단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판단됨

"업무 자체는 국가사업 수행이더라도 전국 광역시 중에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인천시에 환경 전문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인천에 생활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공단을 이전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경인일보」 2018년 9월 10일 기사에서 인용)

•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기관 중에서 환경과 관련한 기관을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유치해 연구단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대상기관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합환경연구단지 인근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운영

- 환경기술 개발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되어 2009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출범하였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647명으로 집계
- 기술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로 이전·유치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 설립되었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83개** 환경기업이 입주

** 일반기업은 59개, 3년 미만의 벤처기업은 24개이며, 분야별로는 폐기물 22개, 대기 19개, 물 19개, 생활환경 등 기타 23개 등으로 구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운영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종합환경연구단지 인근) 전경 •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페이지. http://www.keiti.re.kr/site/keiti/02/10202040000002018092810.jsp (검색일 : 2020년 5월 23일)

-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유지 및 국가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8년에 설립
  -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253명으로 집계

-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환경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
  -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근거하여 2002년에 설립
  -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68명으로 집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청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
  -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설립
  -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150명으로 집계
  - 2018년 11월 이전을 위한 예산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다음해(2019년) 대전광역시로의 이전 가능성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이전 무산
    * 기술원의 대전 이전이 2018년 국회에서 여야 협의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전과 관련한 예산(29억여 원)도 반영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돼야 할 안건이 국토교통부에서 가로막아 심사조차 받지 못함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국 지자체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산업기술원만 개별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기상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

-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고, 보다 정확하며, 기상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 Korean Integrated Model) 개발을 통해 기상재해 피해 경감 및 수치예보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립
- 우리나라 독자적 수치예보기술 확보 및 단·중기 기상예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이뤄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존치를 통한 인천의 상징성 및 정체성 확보

- 인천 부평구 노동복지합동청사에 위치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전국 35개 대학 캠퍼스를 두고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교육 기관에 해당
  - 한국폴리텍은 국가수출단지가 밀집해 있던 인천에 최초로 설립된 기술인 양성 기관, 국립 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의 역사를 잇고 있는 만큼 인천에서는 상징성이 큼

- 정부는 수도권 산업을 견인할 기술인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1968년 6월 인천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기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을 부평구 구산동(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위치)에 설립
  -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노동청 부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지만, 공업 단지가 밀집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
  - 1960년대 들어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천광역시는 서울과 가까운 항만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수출단지가 입지
  -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부평과 주안 일대에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돼 섬유, 기계, 전자 등의 각종 제조업체들이 입주하였고, 1980년대에는 남동공단*이 조성
    * 수도권 정비와 공업 재배치를 목적으로 수도권 내에 산재한 용도 지역 위반 공장들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대에 집적한 국가산업단지
  -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이미지를 정립했으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 환경 악화 등의 문제도 동반
    * 동일방직 인천공장은 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 여성지부장을 탄생시킨 여성 노동운동의 출발지이자 여성 노동운동사의 상징적 사건인 '똥물투척사건'의 현장이기도 함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경 •



자료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웹페이지 http://www.kopo.ac.kr/incheon/content.do?menu=6896
(검색일 : 2020년 7월 14일)

- 전국 기술인 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인천에 있을 때 그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보
  - 전국에 24개 기능대학, 21개 직업전문대학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합해 한국폴리텍대학이 출범
  - 2008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 명칭을 변경한 법인은 현재 전국에 35개 대학 캠퍼스를 총괄
  - 한국폴리텍대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는 35개 캠퍼스 중 부지도 가장 넓고 학생 수, 배출한 졸업생 수, 교육 과정도 가장 많음
  - 인천광역시는 '서울의 배후도시', '회색 도시'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구조 고도화,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 바이오 산업 양성 등으로 재구조화 계획에 있음

- 2020년 6월,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와 '항공 MRO 특화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전문가 자문 및 교육과정 참여,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기술 개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용 교보재 지원 등에 상호 협력

• 한국폴리텍은 항공 MRO 특화 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난 남인천캠퍼스를 항공 MRO 특화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과 개편과 교육훈련 인프라 개선 작업을 진행 중

- 최근 공군본부로부터 F-5 항공기 1대와 J-85 엔진 1점을, 육군본부로부터 UH-IH 헬기 1대와 500 MD 헬기 1대 수증을 확정해 9월 중 남인천캠퍼스 이전을 추진
- 항공기 랜딩기어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통합 공정 실습장 러닝팩토리도 202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
- 2021년 3월 운영을 목표로 한 '항공 MRO 글로벌과정'은 일반 운항정비와 항공기 개조 기술을 포함한 공장정비 능력까지 갖춘 정비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정

  * 국내 정비사 자격 보유자 또는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10개월(1,400시간) 간 교육을 거쳐 연간 20명을 양성할 계획

극지연구소 존치를 통한 극지연구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정립

• 2006년 극지연구소가 인천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부산 이전'의 논의는 지속되어 왔음

- 부산시는 2019년 '극지타운 조성 방안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부산에 옮겨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수행
- 부산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극지타운' 조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국비 확보를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2쇄빙연구선 전용부두 조성도 함께 구상

•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조감도 •



자료 : 극지연구소

- 해양수산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극지연구소 인근에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부산시의 극지연구소 유치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전략에 해당
  -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는 해수부의 극지연구 인프라 강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2020년 10월 착공해 2021 말 개관할 예정
    *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천950㎡ 규모로 극지연구소 내 부지에 극지 코어센터와 빙해환경실, 극지 생물배양실, 교육시설 등의 시설이 들어서며, 185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
  - 극지연구소는 산업체·대학·연구소 등이 극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빙하, 운석, 극지방 퇴적물 생물 시료 등 극지 특수 시료 10만여 개를 제공할 계획
  - 또한 영하 40℃, 초속 20m 바람이 부는 극지 환경을 재현한 연구시설을 만들어 국내 연구자들이 극지에 가지 않더라도 극지 시료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중·고등학생, 대학생, 과학교사 등이 극지 관련 대기과학·지구과학·해양학·빙하학 등 기초 실험을 진행하거나 극지 식물·동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극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창업 지원 플랫폼도 운영

해사법원의 설립 및 인천 유치를 위한 노력

- 인천광역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비롯해 국제 상거리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유치하려는 계획을 수립
  - 인천지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2020년 2월 해양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의 설립과 인천 유치를 올해 의제로 설정
  - 해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원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은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건 특성상 국내법 외에도 국제조약이나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항법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일반 재판부가 담당하면서 소송 지연과 판결에 대한 불만 제기

- 인천광역시와 시민단체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올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법원행정처와 국회 등에 설치를 요구
  - 해사 분쟁은 영국과 미국 등 전통적인 무역 강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추세
  - 중국의 무역량이 많아짐에 따라 국제거래 분쟁과 소송이 자연스레 늘고 있어, 해사 분쟁이 영국과 미국 등 전통적인 무역 강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추세

    * 중국에서는 이미 10개의 전문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인천 전체 교역 물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인천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국제 분쟁이 증가할 전망

-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해사법원의 입지는 인천이 최적이라는 여론이 형성
  -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등 기반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제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해양경찰청,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 사무소 등 관련 기관이 인천에 위치
  - 특히 국내 선사와 해운회사의 소재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국 213개 선주 업체의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위치

    * 수도권 해사 사건 수임 건수는 수도권이 70%, 부산 20%, 호남·제주지역이 10%

  - 인천광역시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위치할 경우 국내 이동 등 단순비용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96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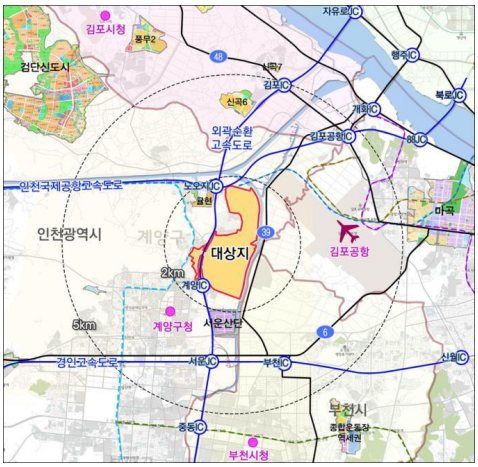
- 해양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인천의 해사법원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국내 주요 해양항만 관련 시설은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되거나 신설되는 추세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발생
  - 2018년 국내 해운산업 금융 컨트롤타워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세워졌고, 아시아태평양 해사 중재센터도 부산에 개관
  - 특정 지역에 해운·항만을 집중하는 것은 수요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해당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서울 지역 공공기관의 이전·유치

- 제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계양테크노밸리가 서울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고 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018년 말에 제기된 서울 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음
  -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업 지원·공항·항만 관련 공공기관을 서울에서 인천의 계양지역으로 재배치해 사업대상지뿐 아니라 인천 전역의 공공행정과 자족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2020년 4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

- 자족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갖추게 될 계양테크노밸리는 약 180만㎡ 규모의 자족·주거용지에 1만 7,000가구의 주택과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자족용지는 판교신도시의 1.4배 크기로 정보통신·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 생태계로 조성
  - 결과적으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의 성패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공동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앵커 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위치도 및 사업대상지 전경 •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인천일보

-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공공기관 이전이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 소재 공공기관이 인천에 재배치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논리에서 출발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16개 기준으로 서울지역의 공공기관(95개)은 인천(3개)의 약 31.7배에 육박

  - 우선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기술 사업화와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이 이에 해당

- 해양도시이자 국제공항이 입지한 항공도시로서의 지역 특성상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공항공사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계양테크노밸리 유치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 서울 지역의 공공기관 현황 •

구분	검토 대상 공공기관
기업 지원 (23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공항·항만(4개)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주 : 밑줄로 표시된 공공기관은 본고에서 청라국제도시 종합환경연구단지로의 이전을 제안한 기관에 해당
자료 : 인천일보 2018년 12월 21일자 기사 "계양테크노밸리 성패, 공공기관 이전에 달렸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394(검색일 : 2020년 5월 23일)

- 계양테크노밸리에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기업의 정주 여건이 좋아질 뿐 아니라 입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계양테크노밸리에는 공공주택과 함께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며, 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입주가 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인천광역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유치 및 활용

-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2018-22)에서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문화성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
  - 시민이 문화주체로 활동하는 문화도시의 원칙과 인천광역시가 문화주권계획을 통해 발표한 '문화성시 인천'의 비전을 연계

- 인천 문화도시 비전의 구현을 위해 핵심가치로 '공감, 공존, 공영'을 설정

  * '공감(共感)'은 인천 문화도시 지향가치와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인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핵심가치로 둔다는 의미

  * '공존(共存)'은 문화도시 인천을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개인, 단체,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핵심가치로 둔다는 의미

  * '공영(共營)'은 인천 문화도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 예술가, 문화매개자,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도시를 함께 만드는 것을 핵심가치로 둔다는 의미

• 인천 문화도시 비전 및 실천범주별 추진목표 •



자료 : 인천광역시(2017: 248)

- 인천광역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관련된 국가기관 가운데 기존에 추진해왔던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인천 유치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한예종은 석관동 캠퍼스가 인접한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2025년까지 캠퍼스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전 후보지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 한예종 유치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매력적인 캠퍼스 부지의 장소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1992년 설립한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는 현재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3개 캠퍼스에 6개의 원을 분산 운영

• 한국종합예술학교 캠퍼스 현황 •

구분		주요시설	규모			비고
			부지(㎡)	연면적(㎡)	건물수(동)	
석관동 캠퍼스	본관 지역	• 본부동(학교본부, 예술정보관), 강의동(연극원, 영상원), 극장동	142,328	56,357	3	• 2006년 신축 * 건물은 문체부 소유
	별관 지역	• 미술원, 전통예술원, 기숙사, 전통문화연수동 등		39,712	16	•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 위임(2018~22) * 의릉 복원에 따른 철거 대상
서초동 캠퍼스		• 음악원, 무용원	15,919	19,001	1	• 리모델링 및 증축(2017) * 토지, 건물 문체부 소유
대학로 캠퍼스		• 한국예술연구소,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연구원	-	4,563	1(3개 층)	• 통계청 사용 승인 (2018~22)
기숙사(신길관)		• 기숙사	-	505	(20세대)	• 교사 면적에서 제외
무용원 주택		• 무용원 주택	-	89	(3채)	
계		-	158,247	120,227	2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조선비즈 2020년 5월 2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부동산 호재라는 대학 유치… 한예종 이전에 경쟁 예고", 검색일 : 2020년 8월 4일)

- 한예종이 2016년 '2025 캠퍼스 기본구상'을 만들어 이전을 준비해 이듬해 후보지 6곳을 정하기도 했으나 이후 논의가 중단되다가 새로운 '2030 캠퍼스 기본구상'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대상 부지 6곳이 5곳으로 축소
- 캠퍼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형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경기 과천시 선바위역과 고양시 장항동 킨텍스, 인천시 연희동 아시아드 부지 등 4곳이고, 노원구 상계동 창동 차량기지는 현재 형태로 나눠 운영하는 네트워크형에 해당
- 통합형이 3곳에서 4곳으로 늘었고, 네트워크형이 3곳에서 1곳으로 줄어 사실상 통합형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

* 송파구는 학생들이 서울 이전을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년간 준비 중이던 한예종 유치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서울시와 해제를 두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

* 고양시도 11만㎡ 이상의 부지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인근에 1,000명 규모의 기숙사 제공을 제안했으며, 구리시도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육사 등이 가까운 갈매 지구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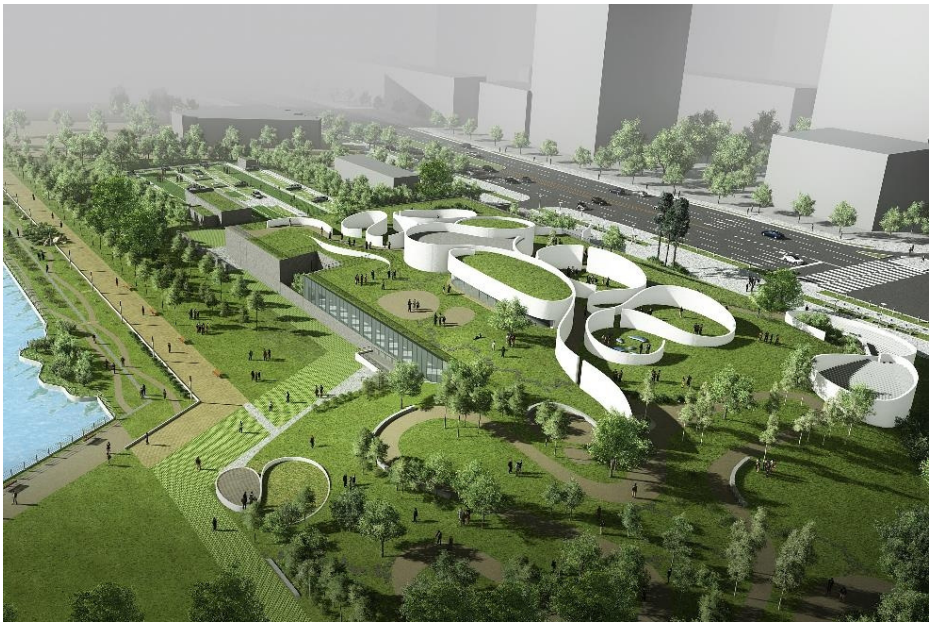
• 한국종합예술학교 이전 후보지 비교 •

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부지 위치	• 방이동 433 일원	• 연희동 378 일원 (아시아드 경기장)	• 장항동 625-34 일원	• 선바위역 인근+ 인재개발원
부지 면적	• 약 12만~14만㎡	• 18만㎡	• 11만 7,568㎡	• 22만 3,000㎡
소유자	• 사유지+국·공유지	• 공유지	• 사유지+국·공유지	• 사유지+국·공유지
장점	• 한예종 선호	• 토지무상임대	• 부지공급조건 유리 • 방송·영상·문화 인프라 우수	• 서초 예술의전당 인접 • 접근성 양호
단점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불허 • 부지 매입비 높음	• 접근성 떨어짐 • 문화 인프라 열악	• 학생·교직원 비선호	• 그린벨트 구역 • 부지매입비 높음

자료 : 고양신문 2020년 7월 12일자 기사 "한예종 유치, 송파 지고 일산 뜬다"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21(검색일 : 2020년 8월 4일)

-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을 이전·유치하여 인천 최초의 국립문화시설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21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송도 센트럴파크에 연면적 1만 5,65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음
  -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세종학당과 국립국어원의 유치를 통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
  - 한류 열풍으로 한글 교육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세종학당 수와 수강생이 늘어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인천공항과 가깝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위치한 송도국제도시에 각국 세종학당의 중심센터인 국내거점시설을 조성한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입국한 수강생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예상

• 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2019년 11월 착공)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2019년 11월 26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00500005(검색일 : 2020년 8월 4일)

해양·항공·환경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존치 필요

-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인천광역시가 이들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해양·항공·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의 동력을 크게 상실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배경으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 극지연구소 등의 존치 여부가 최대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 기관의 존치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음

    * 해양·항공·환경 분야의 사업은 인천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 해당

- 인천광역시는 국제적 수준의 항만·공항·컨벤션 시설을 보유한 도시로, 극지 연구와 항공분야 기업·연구기관 유치와 해외 교류에 지리적인 이점과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각종 장비·시설과 관련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자체 추산으로 1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공공기관의 인천 존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청라 로봇랜드에 입주한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시의 항공·드론산업의 협력·제휴 기관으로, 인천광역시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유휴 부지에 국가 드론 시험·인증시설을 조성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드론은 이곳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드론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기업 유치의 앵커시설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인천광역시는 한국환경공단 등이 입주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에코사이언스파크(강소특구) 조성 사업을 환경부, 인천대 등과 공동 추진 중에 있음

- 인천광역시는 각종 환경분야 기술의 인증과 사업화를 통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수행의 최적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핵심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이전할 경우 경쟁력 약화가 우려

• 인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 연구개발특구 예정지 •



자료 : 인천일보 2020년 7월 23일자 기사
http://m.incheonnewspap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13#_enliple
(검색일 : 2020년 8월 4일)

-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극지연구소의 경우 부산이 적극 유치전에 나서면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어려움을 가중하는 상황
  - 송도국제도시의 우수 산·학 인프라와 결합한 시너지가 소멸될 우려가 있어 지역 내 반대여론이 높음

- 인천광역시는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2020.7.15)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극지연구소·항공안전기술원·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이 인천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의 이전은 시설·장비를 옮기는 데 최소 1천억 원이 소요되고, 해양수산부가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인 '극지환경재현 실용화센터' 건립에도 차질 예상되는 등 막대한 인프라 투자의 손실을 초래
  - 로봇랜드에 입주해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도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드론 산업 육성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 한국환경공단 이전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기능 약화와도 직결되며, 인근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유지 및 설립

- 노무현정부 당시 인천광역시는 의회에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총 17개 관계기관에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당시에 인천광역시는 LNG 인수기지가 있는 인천지역에 가스공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2005년 6월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인천에 소재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마저 이전하기로 확정 발표
  - 인천지역에서 이전하기로 발표한 4개의 기관은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교육기관이 주이며, 이는 이전에 필요한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당시에 인천시 의회에서 비판

- 또한 정부에서 주장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무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발표한 수도권발전대책에도 역행하며, 수도권 공동화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비판
- 인천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규제 관련법 개정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보장을 중앙정부에 요구

•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리로 인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으나,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현존하는 공공기관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울·경기와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했고, 지방소비세는 적게 배분받아 왔음
- 인천에는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 공공기관 수가 적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남아있던 공공기관마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는 결과를 나타냄
-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는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곳은 현재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8개)의 37.5%에 해당

  *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 당시에는 인천의 공공기관 6개가 지방으로 이전

- 특히 극지연구소와 항공안전기술원의 경우 23개의 공공기관이 입지한 부산광역시가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의 문제를 야기

해양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해양기관의 재배치

• 인천의 해양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단 한 곳에 불과해 해양기관의 특정 도시 편중 문제가 나타나며, 이들 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해양기관이 재배치될 필요성이 제기

- 인천항만공사와 극지연구소는 해양도시 인천의 대표적 해양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극지연구소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기관이므로 인천의 해양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유일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62.5%가 서울과 부산에 입지
- 특히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입지하고 있음

  * 선박과 항만 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투자, 해양 자원 연구·개발, 해양 분야 우수 전문 인력 양성, 해양문화·산업 유산 발굴·보존 등 해양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서울에 위치
- 나머지 공공기관 소재지는 세종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2개 기관, 전남에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개 기관, 울산에 울산항만공사 등 1곳, 충남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1개 기관이 입지

•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와 남북 간 해상 교역 중심지,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 등 각종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인천은 해양도시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해양 공공기관이 1개밖에 없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

- 인천에 소재했던 해양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2012년에 국립해양조사원이 부산으로, 2015년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세종으로 이전

• 인천광역시의 해양친수도시 기본구상(6대 친수거점) •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서해 5도를 품고 있고 수도권 관문항이자 수산업 중심축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을 유치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 공공기관들이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이 균형발전과 거리가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해양도시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울에 소재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해양조사협회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https://innocity.molit.go.kr).
관계부처 합동(2020).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이해찬의원실 보도자료(2017). 이명박, 박근혜 정부 멈춰버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천광역시(2020). 인천통계연보.
통계청(http://kosis.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http://www.kopo.ac.kr/incheon/content.do?menu=6896).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